

# 전북출신 국회의장 · 부의장 배출 관심

### 국회의장은 정세균 의원에 힘 실려... 부의장에 조배숙 의원 여성 지도부 진출 유리하게 작용 전망

제20대 국회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장, 부의장 배출여부에 기대와 관심이 쏠린다. 전북출신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맡게 되면 향후 전북 정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북출신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종로), 부의장에는 국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조배숙 의원(익산)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직은 새누리당이 8일 국회의장직 포기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정세균 의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에 부의장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의장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 1인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눠 갖는 식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자천타천으로 심재철, 이근현, 김정훈 의원 등 3명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나란히 4선에 오른 정동영, 조배숙,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의원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내년 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권 또는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부의장 도전에 관심이 없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한 김동철, 주승용 의원은 다른 의원에

게 부의장직을 양보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배숙, 박주선 의원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일단 여성 의원들의 지도부 진출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배숙 의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게 관측통들의 입장이다.

또한 계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여성 의원들이 한국정치에 퍼진 계파 패권주의의 퇴조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선출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출신 부의장이 된다.

무엇보다 정세균, 조배숙 두 의원은 전북 도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하진 전북지사에겐 누구보다 반가운 존재다.

비록 당은 다르지만 거물급 중진 의원으로서 전북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누구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떤 조화를 이뤄내느냐에 따라 향후 전북 발전 속도에 힘이 붙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이들의 국회의장, 부의장 진출은 그동안 정치 번들로 인식된 전북을 정치 핵심지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신광영 기자

## 김부겸 의원 전주대 특강 “20대총선 정권·정당 심판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대구수성갑)은 “20대 총선결과를 분노한 유권자가 정권과 정당을 심판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20대 총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전주대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은 뜻밖의 여소야대 결과가 나왔고 아무도 성난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 특히 장노년층에 대한 새누리당 영남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청년 세대가 투표에 대거 참여해 ‘청년 실업’ 등 자신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시, 선거를 뒤집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권자가 응징에 나선 이유로 정치와 경제로 나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 여당의 오만과 독선, 야권의 무능을 꼽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멈춘 경제, 소득 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교육불평등, 주거불안, 가계부채 등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도 꼽았다.

김 의원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김부겸 당선, 김영춘 등 8인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영남에서 당선돼 26년 만에 아도로 귀환, 전남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재선 성공, 전북에서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 당선 등은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희망을 갖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일 잘하는 정당 집권을 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생산능력 강화, 민생이슈 우선, 민생지표 개발, 국민의당과 협력적 경쟁관계 구축, 공존의 공화국 비전을 세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정운천 ‘여교사 성폭행’ 현장 방문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국회의원은 8일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전라남도를 찾아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민생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남을 찾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민생특위는 정책위 산하에 구성된 4개 특별위 중 하나로, 이번 방문에는 특위 구성원인 이명수(위원장), 정운천(부위원장),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을 보고 받은데 이어 오후에는 교육부 및 전남교육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 책임자와 대책을 논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수만도 못한 여성 인권 유린행위다”면서 “경찰당국은 사건공모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세월호의 진실 인양만이 답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 대통령의 인사 'TK+충청'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단행한 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3명의 차관 인사에는 출신 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들어 있는 듯해 눈길을 끌고 있다. 6명의 신임 인사자 중 2명이 TK(대구경북), 2명이 충청 출신이란 점에서도.

이는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하면서 정치권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TK + 충청' 연합설과 맞물려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김재원 전 의원은 경북 의성 출신이고 청와대 교문수석에 오른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은 대구 출신이다. 또 차관 중에는 이준원 농림부 차관이 충남 아산 출신이고,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충남 보령 출신이다.

제주 출신인 현대원 미래전략수석과 전남 보성 출신 김형석 통일부 차관을 포함한 신임 인사자 6명 중 4명이 'TK + 충청' 인 셈이다.

이번 인사를 반 총장을 둘러싼 TK와 충청 연합설에 결부시키는 게 무리일 수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 등 핵심 인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사항이 들어가지 않기는 어렵다고 볼 때 TK 출신인 박 대통령의 충청권 구애가 이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성주 기자

## 도의회 산경위 예산 심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집행잔액 · 국비 반납 등 지적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8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전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최진호 의원(정주6)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10억원 중 1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센터장의 잦은 변동에 따른 기관의 사업부실로 본다며 질책했다.

이호근 의원(고창1)은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이 교육생 중도 이탈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면서 불성실한 교육 참여와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포기 교육생에 대해서는 차후 지원 받은 교육비를 징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군산의 풍력발전소 1기 고장으로 인해 풍력발전소 복구 관련해 3,500만원 가량의 예비비를 집행 수리했다. 하지만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에 대해 현 편성 예산의 지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이다. 경제산업국이 집행한 풍력발전소 복구 비용은 발전소의 내구연한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대기업 퇴직자 활용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1억 9,000만원에서 5,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 편성 예산 중 30%나 남았는데 불구하고 올리는 예산은 더욱 증액시켰다. 지난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을 무슨 근거로 증액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따져물었다.

강병진 의원(김제2)은 도 경제산업국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이 많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사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반납한 것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국은 도의 경제분야 핵심부서로서 사업추진과 업무에 매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북의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환복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지난 7일 전주시 소재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을 2차로 방문해 시설공사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지활동은 지난 1월 12일 심사 보류된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환경관리특별대책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지상황 추가 파악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복위원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2곳을 재방문해 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을 살펴봤다. 또한, 파쇄, 소각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을 방지하는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위원들은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점검 후 환경오염 방지 시설물의 인정기준과 최적의 환경관리 방안 등에 중점 논의한 후 도청 관계자에게 건설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강구 및 업체와 지역주민의 상생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영수 위원장은 “행정,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비산먼지와 소음피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금번 정례회 1차 회의에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사를 계획한다. /신광영 기자

## 이학수 “육정호 갈등 도가 중재해야”

전북도의회 이학수 도의원(정읍2)은 “육정호 갈등이 상생협의를 내용으로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전북도에서 비롯됐다”며 전북도의 중재역할을 촉구 하고 나섰다.

육정호는 임실군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 제안에 따라 2015년 8월 전북도와 정읍, 임실, 순창 등 3개 시군이 상생협력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읍시 산내면과 임실군 운안, 강진면 일원에서 정읍 산내면 일원으로 재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상수원 개발계획을 갖고 있던 임실군은 이를 계기로 육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여 2015년 10월,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 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의원과 정읍시는 임실 수상레포츠타운 사업이 지난해 5월, 전북도와 3개 시군이 합의한 상생협력 선언서의 내용을 위반해 전북도의 투자심사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상레포츠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정읍시는 그동안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 '전라북도 3시군은 육정호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육정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확보와 연계해 그 추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학수 의원은 “수상레포츠 사업과 관련해 정읍시는 수차례 임실군과 전북도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지만, 협의는 고사하고 도 재정투자심사 때에도 이 같은 내용은 묵살됐다”면서 “육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12만 정읍시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성급하게 개발사업 투자심사를 통과시킨 전북도의 행정처리는 명백한 잘못이다. 육정호 갈등을 증폭시킨 전북도가 임실군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북도의 중재역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지역위원장 직권 임명 가능성 있어

### 조강특위, 후보 심사 기준 논의... 다음주 정밀심사 후 경선룰 결정될 듯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위원장 후보 심사 기준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은 당원 정비와 대의원 선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차기 당 대표 및 대권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경선 실시 여부보다는 후보 자들에 대한 정밀 심사와 심사 등 큰 틀만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에 따라서 직권 임명 가능성도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자 지역구에 대한 정당 지지도 ▲후보자가 출마 지지도 ▲경쟁 상대와의 득표율 차이 ▲출마 낙선 경험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패배,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채워질 예정인지라 더욱 관심을 끈다.

또한 전주(이상직, 최형재), 김제(부안 김춘진, 최규성), 남원(임실순창(박희승, 장영달), 군산(김운태, 박재만) 등 4개 지역구는 복수 후보가 공모해 경선 지역 포함 여부와 경선룰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가장 최근 치

른 경선은 지난 2015년 유성업 이상직 후보 도당 위원장 선출이다.

당시 전국 대의원 50%와 관리당원 50%를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도내 정치권은 지역위원장 경선룰이 도당 위원장 선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복수 공모한 지역의 경우 관리당원이 많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 관계자는 “조강특위가 다음주쯤 다시 열릴 예정이다. 우선 공모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와 심사 이후에나 경선룰이 결정될 예정이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정의당 “김재원 정무수석 임명 노골적인 친박 일자리 창출”

정의당은 8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임명에 대해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고 20대 국회에 나설 수 없게 된 친박 핵심인사를 구조하는 노골적인 친박 일자리 창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외의 인사 면면을 봐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미래전략수석에 임명된 현대원 서경덕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브레인이라 일컬어지던 인물”이라며 “창조경제의 허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주 기자